국정신문

1995년 5월29일 (월요일)

週刊 / 비매품

國政指標 / 新韓國창조

깨끗한政府 / 튼튼한經濟 / 건강한社會 / 통일된祖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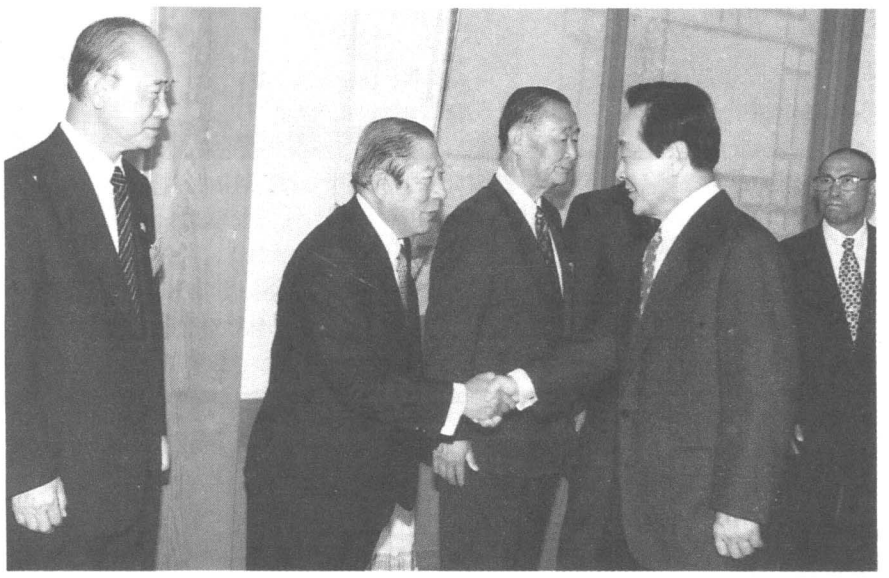
發行人 吳隣煥 · 編輯人 李敬在 · 發行處 公報處 政府刊行物製作所 / 우편번호 110-021 서울 鍾路區 付岩洞 182-1 / 전화(02) 391-1027, 395-1031 · FAX 391-1034

광복 50

대통령 軍원로들과 한자리

국민安保의식 鼓吹에 앞장서야

金泳三대통령이 24일 張泰玩재향군인회장,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星友會 李成浩회장 등 軍원로 66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한 것은 투철한 안보를 위한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또 최근 核문제와 북한의 정전위 무력화 시도 등 심상치 않은 한반도 주변상황과 관련, 육·해·공군의 원로들이 국민들의 안보의식 고취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 것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안보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金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안보의식"이라고 전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몸바쳤던 군의 원로들이 그 정신적 지주가 되어 우리 국민의 역사인식이 올바르게 되도록 적극 노력해주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金泳三대통령은 24일 軍원로 66명을 청와대로 초청,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金대통령은 앞으로 "여러 측면에서 재향군인회와 군원로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월남전 고엽제 피해자문제에 대해서는 "취임 때부터 고엽제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 법률을 제정한 것"이라면서 "환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는 7월 미국 워싱턴에서 거행되는 6.25참전기념비 제막식을 계기로 6.25가 어떤 의미를 갖는 전쟁이었는지를 온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통신 不法 집단행동

정부, 국가 安全위협 강력 대처

金泳三대통령은 25일 "노동행정을 펴나가는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일"이며 "특히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진념 신임 노동부장관에게 신임장을 주는 자리에서 "선진국 문턱에서 불법노사분규로 시간을 허비하거나 국력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고 전제, "勞든 使든 법을 어기는 행위는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동행정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신고爭議 행위

陳노동부장관도 취임식후 기자회견에서 "한국통신은 국가와 기업운영에 엄청난 파급을 미치는 국가신경망"이라며 "우선은 노사간의 갈등이 해소되도록 힘쓰겠지만 법과 질서, 원칙에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은 한국통신 노조가 선언한 준법투쟁은 단체협상 진행중에 발생한 미신고쟁의 행위로서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수배중인 노조간부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모든 법규를 적용, 빠짐없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통신大亂' 사전 방지

이는 한국통신의 분규가 장기화될 경우 예상되는 부분적인 통신장애 등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기간통신망의 마비로 국가안보까지 위태롭게 할 '통신대란'의 위험을 사전에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다. 정부는 한국통신 노조가 결정한 정시출퇴근 기술수준 준수, 잔업거부 등 '준법투쟁'의 집단적 행동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국민생활의 불편과 국가 기간시설운용의 공백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행동이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받을 수 없음도 물론이다. 金대통령이 앞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사분규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로 보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들은 한국통신의 분규가 몰고올지도 모를 엄청난 피해에 불안해 하고 있다.

정상 노조활동 보장

정부는 사태의 빠른 수습을 위해 컴퓨터통신망으로 노조의 투쟁방향 등을 지시하고 있는 위원장 등 수배자의 조기검거에 경찰력을 모으고 있다. 민영화반대 임금가이드라인 철폐 등을 주장하며 그간 수차례에 걸친 불법행위를 주도해온 현 노조집행부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경우 파업에 대비한 대체인력의 투입 등 '통신망 안전운용대책'도 이미 마련해 놓았다. 정부는 언제나 정상적인 노조활동은 적극 보장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한국통신의 불법 단체행동에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사태가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徐光植기자

이번호지면

2면 • 대통령 동계U대회 지시
• 한국 유엔 安保理가입 의미
3면 • 여론조사 신뢰도 높이려면
• 고위공무원 지방자치 特講
4·5면 선진국 勞使관계에서 배운다
• 바람직한 방향과 각국 사례
• 국무위원 語錄
6면 • 언론보도…부처의견
• 외신에 비친 한국
7면 • 내가 읽은 책 「新노동조합」
• 이사람 안광구 특허청장
• 영어한마디
8면 • 6월의 독립운동가 張鎭弘의사
• 청사 게시판/정부간행물

국정녹음서비스 발간

5월29일 제34호 총리 방송기자클럽토론회 연설

「준법투쟁」이란?

爭議행위로 적법절차 필요

준법투쟁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평소보다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이나 실적을 떨어뜨려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집단행동을 말한다. 현재 이러한 준법투쟁은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의 제한·금지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평화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잘못 이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준법투쟁이 ①「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②「업무의 正常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인 한 당연히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는 다음과 같은 여러 판례가 나와있다. 집단연차휴가, 집단월차휴가, 집단조퇴, 집단생리휴가로 인해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했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근로자집단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압력수단으로서 안전, 위생규정 등을 필요이상으로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을 저해한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다수의 노조원들이 수개의 배식구중 1개 또는 극소수의 배식구만을 이용하여 급식을 받음으로써 지정된 중식시간을 상당히 연장시켜 사실상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등이다.

따라서 준법투쟁은 여타 쟁의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쟁의신고, 냉각기간 등 노동관계법상 제반절차를 준수한 이후에 행해져야 한다. 한통 노조가 벌이고 있는 준법투쟁은 위의 제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위법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부 공보관실

대통령 동계U대회 지시

"국민과의 약속 꼭 지켜야 한다"

무주-전주권 인프라 발전과 연계

金泳三대통령은 지난 22일 97년 1월 무주·전주에서 개최되는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준비사항평가회를 주재, 高炳佑 동계U대회조직위원장과 趙南照 전북지사로부터 준비사항을 보고받았다.

金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재임중 세계적 규모로 열리는 유일한 대회인 동계U대회에 관심이 많다"면서 "이 행사는 국민에 대한 약속의 이행사항이기도 하므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폭적 지원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또 "금번 동계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2006년 동계올림픽 유치의 시금석이 될 것인 만큼 특히 도로와 숙박시설마련에 만전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동계U대회를 통하여 2000년대 동계올림픽유치기반을 마련하고 경기장시설과 숙박·문화시설·도로망 확충을 통한 무주-전주권 연계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종합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민족적 자긍심을 다시 한번 고양, 국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조직위원회는 국제종합제전인 동계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첨단 경기장 시설은 물론 도로, 숙박 시설마련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사진은 작년 10월22일에 있었던 스키경기장 기공식 장면)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2백32억원을 투자하여 빙상경기장을 마련하는 것을 비롯, 경기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국제규격에 적합한 최첨단기재로 건설하기로 했다. 숙박시설로는 전주에 7백66억원의 民資를 유치, 대회본부호텔과 선수촌아파트 3개동을 마련하고, 무주에도 3백76억원을 들여 관광호텔 3백24호실과 선수촌아파트 3개동을 건설할 계획이다. 대회기간에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위해 대회 지정港으로 운영할 예정인 군산공항-전주-무주경기장을 잇는 전북동서간 간선도로 1백20㎞의 4차선화 계획을 조기 완성하고, 교통병목현상이 예상되는 적상-설천 도로도 4차선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부간선도로의 전주-무주 지역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온천지역인 화심과 마이산이 있는 진안간 22㎞를 '세계화'의 상징거리로 개발키로 했다.

세계화거리는 하이킹거리, 바이킹거리, 하이킹·바이킹공용거리 등 3가지로 조성, 완벽한 주차시설과 렌틀하우스를 세우고 각 마을에 스위스·체코·프랑스·이탈리아 등 15개국의 전통가옥을 건축하기로 했다.

한편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상황과 조직위 각종 소식을 국외에 널리 홍보하고 전국민의 공감대를 형성,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유도하기 위해 97동계U대회 소식지를 국문·영문 두 종류로 발간할 계획이다. **崔 江기자**

한국 유엔 安保理 진출

국제문제 해결 주도적 역할 수행

정치·경제·통상 國益증가 가속

咸 明 澈
외무부 국제연합국 국장

5월19일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아주그룹회의는 지난 1년간 경합을 해오던 스리랑카가 사퇴를 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96~97년 임기 아주지역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한국을 단일후보로 추천하게 됐다. 이로써 이변이 없는 한 올 가을 제50차 유엔총회에서 실시될 선거에서 한국이 안보리이사국으로 피선될 것으로 보인다.

91년 유엔가입 이후 우리의 對유엔 외교는 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문민정부는 '신외교'의 기치하에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제고를 주요 외교목표로 설정하고, 제반 유엔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국제평화와 안정유지 분야에서는 93년 소말리아 서부사하라, 캐시미르 및 그루지아 평화유지활동과 유엔평화유지 상비체제(Stand-by Arrangements)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캄보디아, 모잠비크 유엔 선거감시단 참여 등 개도국 민주화를 위한 활동과 유엔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기여도도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활동 결과로 짧은 기간에 유엔에서 중견국가로 발돋움한 한국은 유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기반을 다지기 위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하였다. 93년 9월 당시 韓昇洲외무장관이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안보리 진출의사를 밝힌데 이어 94년 3월 유엔에 한국의 안보리 입후보결정을 정식 통보하기에 이른다.

정부는 이후 정상회교, 외무장관 등 고위 인사교류, 각국 주재공관, 유엔대표부 등 모든 채널과 계기를 최대로 활용한 총력 교섭에 들어갔다. 그 결과 95년초에는 우리 입후보 지지국이 1백여개국을 넘어섰다.

한국과 스리랑카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자 유엔에서는 스리랑카의 사퇴 종용과 한국에 대한 아주그룹 추천문제가 본격 논의돼, 결국 5월19일 아주그룹 국가들은 한국을 단일후보로 추천하였다.

하지만 아주그룹국가들로부터 아주그룹을 대표할 단일후보로 공식 추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엔안보리 진출을 위해서는 금년 가을 제50차 총회에서 실시될 선거에서 투표국의 3분의 2이상(유엔회원국 1백85개국 중 약 1백30개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아주그룹 추천 획득이라는 유리한 위치를 최대한 활용, 전 유엔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지교섭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계획이다.

우리의 안보리이사국으로의 진출로 한국이 외교무대에 어떤 역할과 영향력 행사가 가능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최근 안보리의 역할강화 추세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탈냉전 이후 유엔의 역할강화 추세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안보리의 위상회복을 들 수 있다. 즉 과거 동서냉전시대 미·소간 거부권 행사로 인한 대립분위기에서 벗어난 안보리는 명실공히 국제평화와 안전의 수호자로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수치상으로 보아도 45~89년 주요 국제분쟁해결을 위한 안보리 결의 총수는 6백46건에 불과했으나 90~94년 채택된 결의는 3백23개에 이르고 있다. 유엔헌장의 핵심은 헌정제7장의 강제조치로 이라크, 리비아, 아이티 사태 등 국제분쟁에서 보듯이 수시 발동되고 있다.

안보리의 역할강화 추세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의 활성화에서도 확인된다.

최근의 PKO는 전통적인 휴전감시기능 외에도 선거감시, 난민송환, 과도행정 관리 등 비군사적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48~87년 총 13개 PKO가 설치된 것에 비해 88~94년 총 18개 PKO가 설치됐고, 95년5월 현재 17개 70여개국 7만5천여명이 참여, 양적인 면에서도 크게 성장하는 추세다.

이와 같은 Pax UN분위기는 92년 1월 사상 최초로 소집된 안보리 정상회담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이 정상회담 결의에 따라 92년 6월 제출된 사무총장 보고서 '평화를 위한 과제(An Angenda for Peace)'는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 평화조성(Peace-making), 평화유지(Peace-keeping) 및 평화구축(Peace-building) 등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안보리국 진출은 바로 이같은 국제질서 틀의 핵심 협의체에 열강과 어깨를 겨루며 주요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과 그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미 금년초부터 우리의 안보리 진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우리에게 자국의 주요 관심사항과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해왔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를 벗어난 각종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맡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 외교의 중앙부대 본격진출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안보리국 진출에 따른 부차적 여러가지 중장기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향후 2년간 안보리국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새로운 주목과 신망을 받게 되면 한국의 총체적 국가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통상 등 여타 분야에서의 국익 증진을 위한 영향력이 증대된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국제문제에 대한 관심증대를 자연스럽게 유도함으로써 세계화 촉진에 가속이 붙게 된다.

끝으로 한가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유엔 외교는 양방통행 외교라는 사실이다. 즉 우리가 안보리에 진출함으로써 기대되는 위상제고 및 국익 증진에는 유엔에 대한 기여의무가 수반된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는 2차 대전후 국토분단과 전쟁으로 최악의 빈곤상태로부터 출발, 이제는 OECD가입을 목표로 할 만큼 기적과 같은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GNP 세계11위, 무역량 세계12위라는 국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받은 도움을 국제사회에 되돌려 주고 곤경에 처한 많은 나라들을 도움으로써 유엔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신망을 쌓아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여론조사 개선안

신뢰도 사전검증제도 필요
보도시 오류발생도 막아야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선거여론조사가 활발해 졌으나, 사회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선거 여론조사 사전검증 등 부정확한 여론조사로 인한 폐혜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이 필요하다. 이같은 사실은 공보처가 서울대 행정연구소(金光雄교수)에 의뢰한 여론조사 신뢰도 제고방안 연구에서 밝혀졌다. 사회조사 데이터베이스 형성에 의한 여론조사 분석과 연구, 여론조사 사전검증을 위한 여론조사위원회 등 조사방법적·제도적인 방안들이 개선안으로 제시되었다.

金光雄교수 연구보고서

1990년부터 1994년 9월까지 중앙 8개 일간지에 기사화된 여론조사 4백37건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민주화가 진행될 수록 여론과 정책이 일치하는 경향이 많아진다. 선거운동 기간중 후보지지율 공개를 위해서는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중요한데, 우리의 현실은 여론조사 신뢰도제고를 위한 사전검증노력이 부족하다. 프랑스와 같이 「여론조사에 관한 법안」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때 여론조사 기관들간의 후보지지율에 대한 조사결과의 편차 뿐 아니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여론조사가기관간에 조사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조사단계마다, 여러형태로 발생하는 오류에 기인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언론의 보도방식에 의해서도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조사결과의 '일부보도' '기사제목 선정의 문제' '과장된 해석' 등이 그것이다. 김교수는 신뢰도 저해요인으로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자신들의 의도에 맞는 여론조사를 원하는 의뢰자의 태도, 뉴스기사화를 위한 조사의 긴급성 및 신뢰도 검증 장치의 부재 등 세가지를 들고 조사방법론적 측면과 제도론적 측면에서 신뢰도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전화면접조사는 최소한 2~3일이 필요한데, 이는 선거여론조사시 조사일수가 하루증가 할때마다 조사의 정확도가 0.5%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중과 주말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인다.

둘째 모집단을 대표하는 1,000이상의 비례표집이 필요하고 성별·연령별·직업별 비비례표집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론조사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선거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해석의 오류도 가중치 부여로 어느정도 줄일 수 있다.

셋째 설문지 작성은 각 분야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전부가 여성이며 대다수가 주부인 조사면접원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넷째, 미국여론조사연구협회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결과 발표시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 의뢰자, 표본수, 조사방법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한다면 객관성이 떨어지는 여론조사는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다섯째, 사회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치와 여론조사에 관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해, 충분한 자료의 축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여론조사 풀(pool)을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 방송사, 언론사, 연구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조사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각 기관의 축적된 경험으로 조사의 오류가 줄어들게 되며 소요되는 경비의 절감효과로 높은 신뢰도를 얻을 수 있다.

일곱째,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검증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만한 권한을 가진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의 여론조사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여덟째, 여론조사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오류가 있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어 국민이나 정책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의무규정과 처벌규정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법적인 구속력이 요구된다.

한편 한국행정연구소가 연도별·정책이슈별로 여론과 정책이 일치하는가를 연구 조사한 결과, 1990년부터 1992년까지는 여론과 정책이 일치된 경우는 37건 중 18건으로 48.6%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3년부터 1994년까지는 21개의 사례중 12개가 일치해 57.1%가 여론과 정책이 일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만으로 여론에 대해 정부가 더 민감해졌다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여론에 대한 정부의 반응성이 제고되었다고는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추세에서 여론조사 신뢰도 제고방안의 제시는 공정하고 정확한 여론조사 실시에 기여할 전망이다. ■

고위공무원 지방자치特講

재정·기술지원으로 地方통제
中央의 행정위임사무 재조정

金 益 植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앞서 달라지는 행정의 모습과 제도·법령 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총무처 주관으로 1~4급 재경공무원 3천8백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대비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29, 30일 이틀에 걸쳐 서울지방경찰청과 과천청사에서 열릴 이번 교육의 주 내용은 ▶중앙·지방정부간 국가기능의 효율적 처리방안 ▶지방공무원 업무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협력방안 그리고 변경된 제도 및 법령 등이다. 그중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이란 주제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金益植** 수석연구원의 특강 요지를 소개한다.

지방화의 논거

지방자치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국가발전을 위해 또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가 소모적 대립관계가 아니라 발전적 협력관계로 재정립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시각에서 먼저 지방화의 논거가 무엇이고 지방화에 따른 중앙·지방간의 문제점을 규명한 후 이를 극복해나가는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본다.

먼저 지방화는 사실상 세계화와 하나로 맞물려 있는 개념이다.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세계화의 추진 주체는 국가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화시대의 국가경쟁력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 민간의 경쟁력 등을 결집하여 이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기업 및 지역주민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력을 고취시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중앙·지방간 관계의 변화

이와 같이 지방의 자율성과 자주성의 증대를 가져오게 될 지방자치의 실시는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가 점차 대리자 모형으로부터 동반자 모형으로 전환돼 나갈 것이다.이때 여러가지 문제점 발생이 예상된다.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국가공단, 핵발전소 및 핵폐기물처리장의 입지선정 등 위험성과 혐오성을 가진 시설의 입지문제 등 상호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범위 문제, 구역변경, 시군통합, 사무처리에 대한 비용분담,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의 취소·정지·이행강제 등과 관련하여 상호 갈등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선자치단체장의 등장에 따라 기존 중앙통제의 메커니즘이 더 이상 작용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이 가운데 인사상의 통제는 대단히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통제의 경우도 현재 중앙정부가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재정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적 기능 내지는 간접적 통제와 같은 기능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 민선단체장들이 중앙정부에 의한 권한행사에 묵묵히 순응할지, 아니면 사법부를 통한 판결에 의존할지가 앞으로 주목된다.

발전적 관계정립 방안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간에 바람직한 제도적 개선은 물론 기본이념의 정립과 이에 입각한 양자간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현재의 과도한 중앙집권으로부터 지방분권으로 과감히 나아가되 분권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통합성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하는 것이다.

그 첫째로 중앙집권체제에서의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는 주로 인·허가, 승인, 감사 등 권력적 통제방식 위주로 행해졌으나 지자체하에서는 비권력적 관여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는 단체장 직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력적 통제가 점차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재정지원과 기술지원 등을 활용하는 유인적 통제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제까지 장려적 성격의 국고보조금은 크게 발전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국정에 대한 자치단체의 참여를 위해 일종의 유인적 통제장치로 장려적 성격의 국고보조금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있어 자치단체의 의사를 미리 반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정에 참여함으로써 주민과 가까운 국정수행을 확보하고 상호이해와 합의형성을 촉진하며 상호 이익대립의 예방과 조정의 場을 제공함과 아울러 국정의 종적관계를 시정하는 효과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국가사무,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의 4가지 사무구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해 단체위임사무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체위임사무는 일단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후에는 다만 법령상 중앙통제가 가해지는 범위와 경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한다는 점에서 자치사무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치사무와 거의 동일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단체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위임사무 모두를 자치사무화 함으로써 사무구분을 단순화하고 자치사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국가전체의 사무는 국가사무·자치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의 3가지로 보다 명료하게 분류될 수 있다. ■

선진국 勞使관계에서 배운다

경쟁력 강화 위한 고용불안으로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되어온 선진국의 노·사관계는 대체로 노·사간의 협조적 관계가 매우 돈독하다고 볼 수 있다. 노·사는 진실로 서로간의 합의에 신뢰하고, 어느정도의 예측이 가능한 요구조건을 제시한다. 노조의 활동에 있어서도 극한 대립적 형태의 활동에서 벗어나 국민이 납득할 만한 요구를 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행동에 옮긴다. 더 나아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韓通노조의 준법투쟁 돌입으로 국가의 신경마비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선진각국의 노동운동사례를 통해 우리의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방향을 짚어보도록 한다.

세계화시대의 勞·使

金 大 模 한국노동연구원장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의 노사관계는 세계제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세계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먼저 경쟁력의 측면에서는 인력경영의 합리화가 요구된다. 인력경영의 3대 과제라 할 인력의 양성 보존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인력양성은 앞으로의 산업수요에 부응하도록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훈련제도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 특히 훈련제도는 단순기능공이 아닌 다기능기술자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틀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력보존을 위해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조건과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는 노사분규를 방지하고 노사협조를 증진하는 한편 적재적소에의 인력배치가 가능하도록 유연성있는 노동시장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삶의 질 향상의 측면에서는 근로자의 욕구충족도를 더욱 높여가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산재·고용연금보험 등 이른바 4대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고 임금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어 근로자의 물질적 욕구충족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대체로 갖춰졌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근로자의 정신적 욕구충족을 위해 근로자에 대한 인간적 대우, 사회적 인정과 함께 능력개발과 창의발휘의 기회보장이 필요하다.

'세계화' 시대의 노사관계는 이러한 경쟁력확보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커다란 과제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방향을 잡아보면 ▲첫째, 협조적이어야 한다. 세계제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세계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일은 노사의 총체적이고 결집된 노력없이는 불가능하다. 노사의 利害가 일치하는 부분은 물론 상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 ▲둘째, 참여적이어야 한다. 진정한 협조는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근로자에 대한 참여기회의 확대는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이중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참여의 폭도 넓혀야 한다. ▲셋째, 생산적이어야 한다. 앞으로의 노사관계는 소모적인 零合(Zero sum) 게임이 되어서는 안된다. 노사모두에 이익이 되는 일을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넷째, 효율적이어야 한다. 노사관계를 운영하는 전체과정에서 각종 낭비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노사간의 교섭과정과 노조의 의견수렴과정, 기업의 의사결정과정 등을 가급적 단축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조대표자의 직권 강화, 기업의 의사결정 분권화, 교섭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제적으로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 노사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높이는 일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한편 이러한 참여 협조적 노사관계를 위한 각 주체의 역할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자와 노조는 산업사회의 한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향상시킬 권리와 함께 기업과 국민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생산성 향상없이 임금인상만 요구하는 것은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권리만 내세우는 불합리한 행위라는 것이다. 노조는 조합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다른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국민경제에도 이익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경영자는 참여적 협조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최고경영자의 과감한 결단과 적극적 역할이 요청된다. 사업장이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노사가 서로 존중하고 함께 참여하며 성취하는 '삶터'로서의 의미를 갖도록 경영자는 기업문화의 정착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권위주의를 지양하고 항상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현행 기업별 교섭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인력과 노동정책 등에 대한 경영계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 업종별단체의 역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중립적인 조정자로서 법집행을 엄정히 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노사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나 현행 기업별 교섭체제에서 빚어질 수 있는 독과점 대기업의 노사담합 등을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자율 대상영역과 규제 대상영역을 면밀히 구분,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집단이기·권위주의 함께 버려야

변신하는 美國 노조

李 源 德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의 전통적 노사관계는 참여와 협력관계라기보다 대립과 갈등관계였다. 즉 생산극대화를 위한 노사협력보다는 자기몫 극대화를 위한 노사대립이 전통적인 미국 노사관계의 특징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일본과 독일 등 협조적 노사관계를 토대로 생산성이 높은 국가들이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하여 미국 기업의 위치를 위협하면서 사정은 크게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후반이후 미국 기업은 경쟁력 약화로 세계시장과 미국시장을 크게 상실하였으며 결국 도산과 대량해고에 따른 고용불안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노동조합들은 1970년대말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임금인상이 아니라 임금동결 또는 심지어 임금

세계제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세계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일은 노사의 총체적이고 결집된 노력없이는 불가능하다. 노사의 利害가 일치하는 부분은 물론 상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 ▲둘째, 참여적이어야 한다. 진정한 협조는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근로자에 대한 참여기회의 확대는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이중적 효난 5월1일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절제하는 獨逸 노조

독일의 노동조합은 강력하다. 최근 조직률이 약간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강력한 조직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독일 노동조합은 강력한 조직력의 행사를 절제하며 경제·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말하자만 독일 노동조합은 강력하되 올바르다.

독일에는 4개의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이 있으나 이중 전체 조합원의 80% 이상인 1천1백만명의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는 독일노동조합총동맹(DGB)이 가장 강력하다.

DGB는 16개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가입이나 사업장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공식적인 노동조합 조직이 없다. DGB 소속 16개 산별노조 가운데 3백50여만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금속노조가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이 크다. 따라서 독일 노동조합은 DGB, 그리고 금속노조에 의하여 주도된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므로 독일의 올바르고 강력한 노동조합운동은 DGB와 금속노조에 의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DGB는 1963년 노동운동의 기본이념으로 '뒤셀도르프강령'을 채택하였는데, 이것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수용하고 그 질서 안에서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운동이념 아래 독일 노동조합은 강력한 조직력의 행사를 국가발전을 위해 스스로 자제하는 '책임하의 자유'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금속

단체행사 절제

기업혁신 동반자

양보교섭까지

인하까지 받아들이는 '양보교섭'(Concession Bargaining)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경쟁력 약화가 가져오는 뼈아픈 교훈을 바탕으로 이제 미국의 노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혁신의 동반자로 발전해 가고 있다. 즉 노사가 분배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관계를 탈피하여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세계 어느 기업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가지는 초일류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노력을 서두르고 있다.

이고 결집된 노력없이는 불가능하다. 사진은 지

거대 통신회사인 AT & T사의 경우 1984년에 연방정부의 전신·전화사업에서의 독점체제 해제조치에 따라 다수의 경쟁업체가 등장하게 되었고, 그 결과 수익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대량해고도 불가피하였다. 이러한 악화된 경영여건하에서 기업은 종업원의 참여, 권한의 하부이양,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경쟁력의 강화를 추진하였고 노동조합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1992년 AT & T사와 미국 통신노동조합(CWA)은 '미래의 작업장'(Workplace of the Future)에 합의하였는데, 이것은 노사의 공동노력을 통해 고객의 만족과 근로자생활의 향상을 동시에 실현시키는 생산현장을 건설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노사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노사의 공동노력 결과 AT & T사는 초일류 기업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가장 권위 있는 볼드리지 품질대상을 세 차례나 수상하게 되었다.

GM자동차사의 세턴공장은 1985년 GM과 미국 자동차노조 사이의 합의각서에 기초하여 설립되었는데, 이 합의각서는 미국의 전통적인 대립적 노사관계와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노사간 협력·합작구도가 핵심내용을 이루고 있다. 즉 새턴사에서는 단순한 노사협조가 아니라 노사가 공동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합작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노사의 참여와 협력, 그리고 상호신뢰와 헌신을 통해 새턴을 일본차에 필적하는 우수한 자동차를 생산함으로써 잃었던 소형차시장을 되찾아가고 있다. ■

정책대안 제시

노조의 파업자제 관행과 규칙에서 잘 알 수 있다. 파업은 노사협상을 위한 모든 수단(중재 포함)을 다 사용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불가피하게 쓰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립되어 있다.

또한 파업의 시작은 가능한 어렵게, 파업의 종료는 가능한 쉽게 하기 위해 파업시작은 조합원 75%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하게 하고 파업의 종료는 조합원 25%만의 찬성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이 승인하지 않은 불법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은 조합에서 축출되며, 파업기간중에 조합에서 지급하는 생계비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없다.

이러한 조직력 행사의 절제와 함께 독일 노동조합은 합리적 노동운동·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활발한 정책연구활동과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DGB 산하에는 우수한 인력을 지닌 두 개의 연구소가 있어서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정책대안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독일 노동조합은 조직력 행사의 절제와 합리적 정책제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 및 기업과 함께 위기극복을 위하여 고통분담에도 참여한다.

1960년대 중반 재정적자 증가와 고용불안으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1967년 노·사·정부 사이에 '협조행동'(Konzertierte Aktion)에 합의하여 성장저해적 고임금인상을 자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엄청난 통일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고통분담 정책인 '연대협정'(Solidarpakt)에도 참여하여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있다. ■

생각도 세계화 행동도 세계화

협력하는 日本 노조

金 勳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생산성 협력후 성과배분 주장

일본의 단위노동조합은 기업별로 조직되어 있다. 이같은 기업별 조합을 축으로 한 협조적 노사관계는 일본경제의 고도성장과 석유위기 이후의 안정성장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 경쟁력의 원천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일본의 노동조합이 기업별 조합을 기본적인 단위로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협조적 노사관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별 조합이 이른바 '노사(계급)대립주의'의 논리에 입각하여 개별기업의 경영상태나 채산성을 무시하고 근로조건의 향상을 횡단적·외재적으로 추구할 경우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노동조합은 개별기업차원에서는 생산성향상과 성과배분의 논리에 입각하여 기능하고 있다.

1962년 무역자유화를 배경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자동차메이커인 도요타에서 체결된 '노사선언'은 일본의 기업별 노동조합의 행동논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노사선언은 다음의 세가지 강령으로 압축된다.

첫째, 자동차산업의 흥륭(興隆)을 통해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 둘째, 노사관계는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셋째,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서 기업의 번영과 노동조건의 유지·개선을 도모한다.

도요타의 노사선언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상호이해와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 건전하고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주목되는 것은 고용의 안정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합은 생산성향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업번영을 위한 회사의 제반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것이다. 즉 기업은 어디까지나 시장경쟁력을 유지해야만 그 사회적 존속이 인정되는 만큼 생산성향상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근로생활의 질의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대전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번영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향상의 전제조건이라는 인식은 임금교섭에도 반영되고 있다. 즉 현재와 같은 경기조정국면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이나 업적의 회복이야말로 임금개선에 있어 선결되어야 할 기본 조건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공격적인 단체교섭력의 발휘를 '자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석유위기 이후 일본의 민간제조 대기업의 높은 생산성의 유지는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시스템의 효율화와 작업자의 기능적 유연성을 중요한 조건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기계설비의 도입 및 개선에 의한 생산과정의 기계화·자동화, 작업조직(Work organization)의 개편, 작업방법의 개선, 직무의 통폐합 및 확대를 통한 요원삭감 등 생산합리화에 대해 일본의 노동조합은 ▲생산성향상에 대한 협력→성과배분('노동의 인간화'의 실현)과 아울러 ▲사전협의의 충실→희생이나 불이익의 배제를 기본축으로 기본적으로는 적극적인 협력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

국무위원 語錄

輸出入 함께 생각하는 통상정책 편다

朴在潤 통상산업부장관(5월17일 표준협회 강연)

○…과거 우리 경제는 정부의 지시와 통제를 발전메카니즘의 근간으로 하여 성장해 왔다. 이제 세계 12大 무역국으로 성장한 우리는 '新경제'와 '세계화'의 이념에 맞추어 '경쟁과 협력'을 조화시키는 통상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수출에만 역점을 둘 것이 아니라 상대국의 관심도 수용하여 수입도 함께 생각하는 통상정책을 펼 계획이다. 新경제의 산업정책은 산업활동에 있어서 모든 경제주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창의력을 유발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에 앞으로의 산업정책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산업발전체제를 다져나가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기업인과 근로자간의 협력관계 정립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에도 노력할 것이다.

환경문제, 21세기 새 이데올로기로 부상

金重緯 환경부장관(5월24일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특강)

○…21세기는 환경문제가 주제가 되고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부상할 것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이 지탱가능한 개발(ESSD)'이란 개념은 환경문제에 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질오염의 주범은 생활하수로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량이 부족하면 수질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따라서 수계별 연결통로, 즉 한강물을 낙동강으로 보내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오염규제방식은 농도규제방식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총량규제방식을 도입, 적극 추진할 것이다.

"美·北 장성급 접촉 반대" 보도
韓美 사전협조 통해 의견 조정

국 방 부

'美, 北에 장성급 접촉제의에 한국측 반대' 제하의 보도(5월21~22일 각 일간지) 내용에 관한 국방부 입장을 밝힌다.

지난 5월12일 럭(Luck) UN軍사령관이 李養鎬국방장관에게 최근 북한측의 停戰협정 무력화 책동 및 비무장지대(DMZ)활동상황과 관련해 '軍停委틀내'에서의 對北 군사접촉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전해온 것은 사실이다.

럭장군은 이 서신에서 미군 장성(소장)이 한국군 장성(준장)과 함께 판문점에서 북한측 장성과 접촉하는 문제에 대해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물어왔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유엔군사령부의 軍停委 틀내에서의 對北 군사접촉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대표단 구성은 우리측의 정전협정 준수 및 軍停委 기능 정상화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수석대표(黃源卓소장)를 제외한 여타 한국군 장성을 포함한 4명의 軍停委 대표 전원이 참석해야 한다.

둘째, 회의장소는 군사분계선상의 군정위회의실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셋째, 회의 의제는 DMZ관리 등 정전협정관련 사항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넷째, 실제회담은 유엔군사령부측의 제의에 대한 북한측의 명시적 동의를 받은 후에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했다.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5월17일 회신을 통해 李국방장관이 강조한 한국군 장성을 포함한 4명의 군정위대표 전원이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고 회담도 군사분계선상의 군정위회의실에서 갖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5월19일 판문점 일직장교 접촉을 통해 5월23일 회의개최를 제의하는 것에 대한 국방장관의 동의를 요구해왔다.

국방부는 회담명칭을 단순히 '특별대표회담'으로 하는 것은 美·北韓 양자간의 장군급 회담으로 오해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적합한 명칭이 아니므로 '군정위 틀내에서의 장성급 대화'로 할 것을 제의했다. 회담개최시기는 유엔군사령부측안에 동의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참고로 북한은 지난 91년 3월 정전위 유엔측 수석대표로 黃源卓소장이 임명된 이후 정전위 본회의 참석을 거부해왔다.

북한은 94년 4월 정전위 대신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설치하고 대표부 이름으로 대령급 비서장회의에 나와서는 北·美간 장성급 회담을 주장해왔다.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는 그동안 유엔군사령부와 대북 군사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對北 군사접촉과 관련 한국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측은 항상 긴밀한 사전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측도 한국측과의 사전합의없이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유엔군사령부측이 북한측에 제시한 23일 회의는 무산되었다. (공보관실)

"中國 인공강우 한반도영향" 보도
먼거리 작은 규모 큰 영향 없어

기 상 청

중국 인공 降雨실험이 한반도 氣象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중국이 5월12일 北京市 부근에서 요드화銀 살포탄 1백76개를 공중투하하는 방법으로 5차례의 인공강우실험을 해, 비를 더 많이 내리게 하는데 성공했다는 보도(5월14일자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비를 뿌린 이 비구름은 몽골지방에서 발생해 중국 河北지역을 거쳐 한반도로 이동하는 중이었으며, 이 비구름은 한국에서는 지난 13일과 14일사이 10㎜내외만 뿌렸다는 것이다. 가뭄이 극심한 봄철에 우리나라에 오는 비구름은 몽골에서 중국을 거쳐오기 때문에 중국이 먼저 인공降雨로 비를 만들어 내리면 우리나라는 가뭄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번 인공 降雨실험은 극히 국지적인 실험이고 단시간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근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다. 北京에서 우리나라까지 약 1천㎞의 거리이고, 기압계 이동에 따른 시간차도 약 2일 정도되어 소규모 실험으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13일과 14일 사이 우리나라에 내린 비는 기압골이 남쪽으로 치우쳐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10㎜내외였고, 제주도에는 50~70㎜의 비가 내렸다.

(공보관실)

"永宗「텔레포트」 확정" 보도
공항 정보시스템만 추진중

건설교통부

영종도 신공항 텔레포트 건설계획 보도(5월14일자 중앙일보)에 관해 건설교통부의 입장을 밝힌다.

보도에 따르면 신공항건설기획단이 공항내의 공항정보센터는 한국공항공단 주도로 민간업체가 건설을 맡고, 신공항 배후지역 및 송도해상신도시를 연결하는 광역텔레포트는 정보통신부의 사업인허가를 받아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구축토록 영종도 신공항 텔레포트 건설계획을 최종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항내 정보통신망을 관리해 공항 전체를 감시·조정·통제하는 중추역할을 맡을 공항정보센터 사업에는 오는 2000년까지 1천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텔레포트는 광케이블·통신위성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도시기능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음성·데이터·화상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첨단정보통신단지를 말하는데, 이 사업에는 5천억원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도의 내용은 한국통신에서 94년 8월24일 발표한 신공항 첨단정보단지구축 기본계획과 인천시의 송도해상신도시 건설계획 등과 연계하여 추정,기사화한 것이다.

공항지역으로 고시된 공항내에서 다양하게 유통되는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공항정보시스템 구축은 추진하고 있으나, 그 밖의 지역은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과 무관한 지역이다. 송도해상신도시 추진관련계획은 인천시, 첨단정보단지계획은 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신공항기획단 건축설비과)

外信에 비친 한국

印 Financial Express(5.20일자)

한국기업의 세계화 印度에 교훈

한국경제와 인도경제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먼저 한국은 꽤 오래전부터 인도보다 훨씬 과감하게 자국시장을 개방해왔다. 금융시장만은 아직도 대체로 규제되고 있으나 다른 분야에서의 개방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어, 인도가 WTO와 새로운 세계무역환경의 도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긍정적인 시사를 해주고 있다.

한국경제는 급속히 발전하여 GNP면에서 93년 세계 제12위, 93년 제11위로 진입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계화의 요구에 상응하는 기업들의 구조개편과 전문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다.

한가지 매우 중요한 분야에서 인도정부는 한국정부에 크게 뒤져 있는 것 같다. 한국에서는 글로벌 비즈니스에 수반하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원들을 훈련시키는 노력이 매우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경쟁을 해나갈 수 있는 '국제감각'을 터득하도록 정상으로부터 말단에 이르는 모든 사원들의 교육 계획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화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룹은 '현지화 계획'을 통해 그들의 직원들을 세계화에 대비시키고 있다.

한 예로 삼성그룹은 매년 60~70명의 사원들을 이 독특한 계획에 따라 외국으로 보내고 있다. 선발된 이들 사원은 어느 나라건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에 가게 된다. 삼성은 올 한해 만도 이 계획에 1억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 대한항공도 같은 훈련을 하고 있다. 인도기업계가 하고 있지 않은 분야가 바로 이것이다. 인도 기업간부들은 휴가를 즐기나 그들로 하여금 인도와의 주요 교역국들의 사업방식을 익히게 하는 전략은 전무한 상태다.

한국제조업자들이 인도제조업자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아지는 또 하나의 분야가 있다. 인도의 대기업들 가운데 다국적 협력을 수용할 능력이나 의사를 보인 기업체가 아직까지는 단 한군데도 없는 것이다.

인도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 국내업체들이 미국의 거대 전기통신기업 모토롤라를 크게 잠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80년대에 80%에 달했던 모토롤라의 시장점유율을 94년말 50%이하로 끌어내렸다. 95년 2월 현재 한국내에서 판매된 휴대폰 총 4만1천8백85개 가운데 모토롤라의 판매율은 49.2%였던데 비해 삼성은 39.8%에 달했다.

그렇다고 한국인들이 외국인 투자가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은 사실상 자유화되었다.

95년 4월1일 이후 외국인 투자가들은 한국에서 신청서 제출후 2백일 또는 그 이상 걸리던 공장건설이 지금은 45일 이내에 할 수 있게 되었다. 토지분할, 환경보존시설과 같은 그보다 덜 중요한 사안들은 15일 이내에 허가가 난다. 한국은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이른바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실은, 정부 각 부처는 물론 45개국 대사관과도 컴퓨터로 연결되어 있다. 최첨단기술을 다루는 외국업체들은 외자계획을 심사하는 부처간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해외에서 자본을 도입할 수 있다. 이들 업체는 또한 관련부처의 심사를 받지 않고 공공 또는 상업차관을 재원으로 한 자본재를 수입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급속한 엔고가 생산을 증대하려는 한국노력에 심각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국제무역망의 구성으로 조성된 기회를 활용하고 또한 자국시장을 국제경쟁자들에게 개방하는데 따른 도전을 극복하느데 있어서는 한국이 인도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 ■

내가읽은책

이책은 하버드대학의 찰스 헥서(Charls C. Heckscher)교수가 쓴 『THE NEW UNIONISM』을 국무총리실의 金允培 과장이 완역한 것이다.

이 책은 기업과 경제를 둘러싼 세계환경의 변화속에서 노사협조를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對기업전략, 기업의 對노동조합전략과 정부의 노동정책에 관하여 여러 대안을 비교·검토하고, 무한경쟁시대의 노사공영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조합 의존도 감소

저자는 우선 국내경쟁의 격화, 기술의 급속한 변화, 첨예한 국제경영 등 노동운동의 파워와 위상을 떨어뜨리는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이 변화는 노동계 및 기업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종업원들의 대표기능이 위축됨에 따라 기업에 대한 종업원들의 공헌(Commitment) 수준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의 소프트化, 서비스化가 지속됨에 따라 非勞組化 성향을 갖는 화이트칼라 노동자가 더욱 증가하고 노동자-경영자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 사업장내의 보건 및 안전, 산재보험, 최저임금, 고용보험 등에 관한 입법의 증가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에의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는 한편, 부당해고, 노동조합·노동쟁의 등에 관한 행정적·사법적 권리구제수단은 절차의 장기화·이행 수단의 결여 등으로 그 실효성이 노사 양측으로부터 의심받고 있다.

새 勞使共榮의 방향

최소한의 合意로 신축운영

趙 健 鎬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제3조정관

적대적 관계 탈피해야

이런 현상은 기존의 노동법과 노사관계가 노사 당사자간의 적대적·평면적·방어적 단체교섭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적대적 관계를 치유하려면 노동생활의 질 향상 운동(QWL:Quality of Work Life) 등 지속적인 종업원 참여를 보장하는 협동적 관계가 모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제안하고 있는 4가지 접근법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는 노동법을 강화하여 노동법 집행기관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벌칙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노사간의 '힘의 균형'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견 타당성이 있어보이지만 '힘의 균형'이란 노사 당사자간의 관계가 '안정적'일 때 가능한 것이다.

둘째는 정부에 의한 직접규제이다.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포괄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의사결정 책임을 박탈한다는 결점이 있다.

셋째는, 경영자주의이다. 이 접근법에서는 모든 종업원들이 경영자(Manager)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 기대된다. 오늘날 IBM, 모토롤라 등 대규모 기업들이 고용안정과 공정한 대우를 내세우면서 자율팀, 유연한 타스크포스 등 참여 메카니즘을 활용하여 조직의 여러 계층으로부터 고도의 창조성을 제고시키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경영자주의는 대표체제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경영진에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다.

끝으로 위와 같은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처방은 결사체노동조합운동(Associational unionism)이다. 저자는 결사체 노동조합이라는 효과적인 노동자 대표체제의 기초로서 필요한 조건으로 기업내 옴부즈맨(Ombudsman)제도·익명제보제도·고충청문제도·直訴制와 같은 적정절차(Due process)의 보장, 공동 사실조사 등 기업에 관한 정보(Information)공유, 노사 상호간에 영향력을 제공하기 위한 기업캠페인(Corporate campaign)·간접불매운동·내부고발자(Whistleblower)보호 등 언론자유의 신장, 다양한 종업원집단 및 기업 외부의 이익단체를 포괄하는 이해관계의 다극화를 들고 있다.

일반적 지도원리 중시

새로운 노동조합은 상세한 단체협약보다 일반적인 지도원리(General principles)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를 중시한다. 필요한 최소한도의 노동조건만 규정하면 충분하다고 한다. 현재의 단체교섭은 너무 상세한 조건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 유효기간 동안의 노사관계를 硬直化시키기 쉽다. 노사 모두에게 족쇄로 작용하는 역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단체교섭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활동 등 비파업적 전술-예컨대 반노조행위를 하는 기업을 여론의 힘으로 비난해 기업의 명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따위-을 강조한다.

끝으로 노동조합이 그동안 소홀히 해온 외부로부터의 助力을 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노동조합이 기업에 대한 외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했으나, 다원화되는 경제사회에서는 여성단체·환경단체·소비자단체 등 외부 이익단체 등과의 연합(Coalition)을 형성하는 것이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1935년 제정된 태프트-하틀리法에 영향을 받아 제정된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규율하고 있는 노사관계에서도 저자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 상황이 露呈되고 있다. 역자는 노동부에서 10년이 넘는 노동행정 경험뿐만 아니라 미국 미네소타 대학원에서 노사관계론을 전공한 관계로 전문용어에 대한 번역의 정확성이 돋보인다. ■

『新노동조합』
찰스 헥서 著 김윤배 譯
고려원刊 · 1995년版

영어한마디

의장 소개받으면 간단하게 답례

의장의 소개를 받은 연사는 간단한 답례를 한 후에 발표를 시작한다. 간단하게 말할 때는

1)Thank you Mr. Chairman, for your introduction.

(회장님의 소개에 감사드립니다.)

혹은 *2)Thank you, Mr. Chairman, for your gracious(kind) introduction.*

(의장님의 과분한 소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발표하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발표문을 전개하게 될지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이 분야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논의할 것이다', 혹은 '이러한 문제에 중점을 두고 얘기하기로 하겠다'와 같은 설명을 하게 된다.

3)This is a very vast topic and so I thought that I would confine myself to the period after the Cold War.

(이 주제는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냉전이후의 시기에 국한시키기로 하겠습니다.)

4)I would like to emphasize the economic relations between our two countries.

(본인은 우리 양국간의 경제적 관계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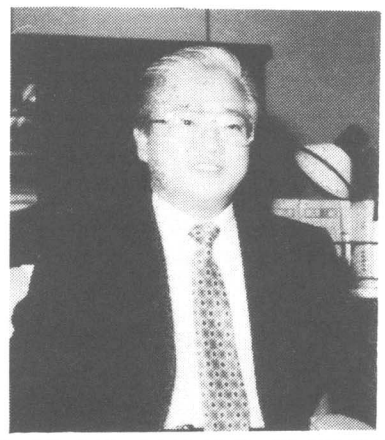
林 香 玉
한국外大 동시통역대학원 교수

세계화 시대의 特許전략

경쟁력·기술력 강화

이사람

안 광 구 특허청장



"WTO체제의 출범으로 인해 特許를 비롯한 산업재산권, 넓은 의미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재권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야겠고 또 이것의 대응방안을 굳게 다져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안광구 특허청장은 『세계화시대의 특허전략』을 출간해 産·學·硏은 물론, 일반국민에게까지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을 실감케 하고 이에 따른 조언과 충고를 체계적으로 기술했다.

"80년대 후반들어 우리의 산업계가 선진국으로부터 특허와 관련해 제소를 당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는가 하면, 엄청난 수준의 손해배상을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저에게 주어진 큰 숙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허 전문인은 물론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론서로서 우리나라 특허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현직 청장의 입장에서 "기술과 특허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 현실적인 시각으로 꾸며져 있다.

이 책 제1부에서는 격변하는 세계정세의 흐름을 정확히 분석·평가하고 세계 제5위의 출원대국으로 부상한 우리의 위상을 소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으로 첫째, '경쟁력의 강화'를 들었다. 이웃 경쟁국들에 비해 뚜렷하게 내세울 우월한 측면이 없음을 진단하고 특허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로서 民官이 함께 헤쳐나가야 할 분야를 제시했다.

둘째로, '기술력의 강화'를 들고 있다. '기술'분야에서도 경쟁은 물론 질적인 면의 경쟁력우위 다툼도 치열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연구개발비를 늘리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우리나라 기술력의 강화전략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安특허청장은 이 밖에도 지난해 약 8개월에 걸쳐 『안광구의 특허교실』이란 칼럼을 신문에 연재, 일반국민과 기업에 보다 쉽게 특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책엔 신문에 연재되었던 내용을 함께 수록했고 부록으로 전 세계의 산업재산권 추이, 세계 주요국의 사례 등을 도표로 만들어 이해를 돕고 있다. **李順姬기자**

6월의 독립운동가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張鎭弘 의사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은 6월의 독립운동가로 비밀항일결사조직인 광복단원으로 1927년에 조선은행 대구지점을 폭파하는 등 항일 구국운동을 펼친 聖旭 張鎭弘(1895~1930)의사를 선정했다.

張의사는 경북 칠곡 태생으로 인동국민학교 재학당시 스승 장지필 씨의 항일사상에 감명을 받아 20세때인 1914년에 조선보병대에 입교, 2년후 제대하였다.

그후 광복단에 가입, 만주 봉천(現 심양)과 연해주 일대를 누비며 독립군을 양성하는 등 적극적인 항일운동을 폈다.

1919년 3·1운동을 진압하던 일제가 우리민족에 자행한 학살·만행·고문 등의 잔학상에 대한 '조사서'를 꾸며 세계 각국에 폭로하는 노력도 벌였다. 또 일제의 관공서, 은행 등 대표적인 한인 착취공공기관을 주폭파 대상으로 삼아 폭탄을 직접 제조, 27년 조선은행·식산은행·도청·경찰부 등 4곳에 대한 폭파를 시도했으나 불발로 끝났다.

제2차 거사에서도 뜻을 못 이루고 이듬해인 29년 2월, 일제의 중의원·경시청 폭파를 추진하던중 일경의 집요한 추격으로 피체되는 불운을 맞았다.

30년 대구고등법원에서 사형 확정판정을 받자 일제에 의한 처형을 치욕적으로 생각하고 차라리 자결을 택해 옥중에서 순국한다.

珠

공공채널 K-TV(14)

지방화 관련 李총리 연설 등

□ **오늘의 국정(29·1일 오후 5시30분)**

▶① '95 발명의 날(29일)

발명의 날을 맞아 우리기업 발명인의 아이디어를 채택하여 우수한 국내외 특허를 확보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사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으로 어떻게 뒷받침하고 지원하는지를 소개한다.

23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에서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지가 釜山으로 결정되자 유치위 관계자가 환호하고 있다.

▶②아시아올림픽평의회 총회(29일)

2002년 아시안게임의 부산유치 확정과정 및 월드컵 축구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그간의 노력을 보여준다.

▶국무총리 방송기자 클럽 오찬 연설(1일)

"지방화 시대와 세계화 시대 함께 오는가" 주제의 연설내용을 소개한다.

▶안전문화 추진 협의회(1일)

본 협회의 구성과 운영이 소개된다.

바람직한 소비문화 토론

□ **K-TV광장(30일 오후6시40분)**

▶과소비풍조 이대로 좋은가

80년대 중반의 거품경제 속에서 흥청망청했던 과소비 풍조가 최근 경기호황과 함께 다시 고개를 드는 조짐이다. 이러한 과소비 풍조를 심층 분석하고 건전하고 바람직한 소비문화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토론한다.

정범구 차세대정치문화연구소장, 김재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총장, 박호용 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장, 신혁승 숙명여대 교수 등 4명이 출연한다.

종합청사게시판

내달부터 대기오염 센서스

환 경 부

환경부는 대기오염원을 정밀조사하는 '대기오염 센서스'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6월부터 96년말까지 전국 2백37개 시군구의 공장·자동차·일반가정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에서 환경부는 15개 시도 및 지방 환경청과 공동으로 ▶공장 등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인 점오염원 ▶승용차·버스·선박·항공기·철도 등 이동오염원 ▶가정 및 상업지구의 지역오염원 등 3대 오염원을 주대상으로 삼아 황산화물·먼지·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 등 네가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실사한다.

세종문화상 후보자 추천

문화체육부

문화체육부는 제14회 세종문화상 수상후보자를 6월1일부터 8월10일까지 추천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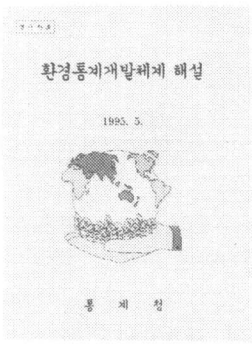
이 상은 문화(문화·예술분야), 학술(인문·사회과학 이론분야), 과학기술(자연과학 이론 및 산업응용분야), 교육, 국방안보 등 5개 부문에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주어진다.

시상은 10월9일 한글날 기념식장에서 하며 수상자에겐 대통령상과 부상으로 각 6백만원의 상금이 전달된다. 기타 문의는 어문과(720-4926, 722-1328)로 하면된다.

정부간행물

국내최초의 환경통계작성 지침서

『환경통계개발체계 해설』



환경문제는 특정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범국제적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통계청 金相植 통계조정과장이 지난 2년여 동안 UN 환경통계개발지침서인 『환경통계체계(Framework for Development of Environment Statistics)』를 완역한 것. 이는 환경통계에 관련한 국내 최초의 서적이다. 환경통계 작성체제의 기본논리인 압박-반응 구조논리에 입각해 환경의 구성요소인 식물상·동물상·대기·수질·토지·토양 및 인간주거환경 등에 관한 통계작성체제를 설명하고 있다.

부록엔 93년 UN통계위원회에서 채택한 신국민계정의 위성계정인 '환경·경제통합 국민계정'에 관한 UN핸드북 원문이 실려있다.

〈**통계청 刊** · 4 · 6배판 · 228쪽 · 문의 222-1841 · 비매품〉

올해 이벤트 1백75건 안내

『95 볼거리와 들을거리』

문화체육부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올 한해의 축제와 행사들-계절별로 내·외국인이 즐길 수 있는 공연, 전시, 축제, 체육대회, 문화교육, 이동문화프로그램 등을 수록하고 있다. 종래의 일시·장소·행사명 중심의 단편적 소개방식과는 달리 행사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출연진·시설 그리고 행사와 관련된 용어해설까지 곁들이고 있다. 또한 96년 2월까지 개최되는 총 1백75건의 행사를 수록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문화예술 1백35건, 청소년 8건, 체육 23건, 종합이벤트 등 10건이며, 계절별로는 연중행사 21건, 봄 41건, 여름 44건, 가을 54건, 겨울 15건.

〈**문화체육부 刊** · 4 · 6배 변형판 · 201쪽 · 문의 720-3822 · 비매품〉

전국 모니터 고발·국내외 언론보도

『94 소비자위해정보와 안전실태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이 94년도에 발생한 소비자 위해와 발생 위험소지가 높은 위약분야에 대해 소비자 안전대책을 목적으로 한 조사내용을 종합한 연차보고서.

이같은 정보는 전국 27개의 모니터병원, 소비자모니터 1백39명 그리고 약 97종의 소비자정보지, 국내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조사된 내용이다.

이들 정보는 다시 전문가들에 의해 분석·평가되어 그 원인까지를 다각적으로 규명해 놓고 있다. 유사한 피해의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소비자 위해정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곁들여 소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刊** · 4 · 6배판 · 426쪽 · 문의 709-3716 · 값 1만원〉

쉽고 재미있는 세계화 이야기

『세계일류라구요?』

세계화는 문명사적 대변화를 올바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과거의 잘못을 고치는 개혁인 동시에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틀을 세워나가는 개혁임을 삽화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세계일류가 되는 것이 바로 세계화라고 밝히고 있다.

〈**공보처 刊** · 4 · 6배 변형판 12쪽 · 문의 720-3049 · 비매품〉

〈**정부간행물판매센터**〉 **서울**(02) 교보문고 397-3628, 종로서적 732-2331, 대한통계협회 725-4344, 한국경제서적센터 737-7498, 을지서적 757-8991, 프레스센터 정부간행물판매센터 734-6818, 태평서적 777-7551, 도서출판 진한도서 319-3535, 동화서적 555-7312, 서울문고 553-3038, 매거진월드 785-6136, 한국통계서적센터 712-9301 / **부산**(051) 영광도서 816-9500, 부산도서 517-1011, 문창서적 241-2411 / **대구**(053) 학원서림 425-0050 / **인천**(032) 대한서림 762-7337, 시민서림 864-5577, 부평문고 529-0077, 한겨레문고 515-2600 / **광주**(062) 나라서적 222-2828 / **대전**(042) 경제자료안내실 580-4414, 대훈문고 254-7007, 문경서적 253-8131, 대전서적 253-5019 / **경기** 경제자료안내실 (02)502-2312 교학사 (0331)255-5706, 동아서적 (0331)255-6436, 경기서적 (0331)255-7500 경인문고 (032)654-1677, 희문서적 (0344)966-1102, 원당서점 (0344)966-4545 / **강원** 청구서적 (0361)57-3300, 교학사 (0361)54-4133, 투비서점 (0371)43-0345, 강릉서점 (0391)648-3178 / **충북** 청주서점 (0431)221-5724 문학사 (0441)847-2819 / **충남** 양지문고 (0417)556-6001, 문광사 (0416)55-2605, 종로서적 (0452)935-1313 / **전북** 홍지서림 (0652)88-5311, 대한서림 (0653)52-7700, 원서점 (0653)54-2785, 동지사서점 (0653)855-2717, 중앙서점 (0681)535-2784, 진서점 (0671)625-4988, 동화서점 (0673)42-5149 / **전남** 한림서림 (0631)44-5703, 일광서점 (0661)52-4414 / **경북** 학원사(0562)47-3585, 학원서점(0546)456-6222, 스쿨서점 (0571)57-9110 / **경남** 학문당 (0551)46-2925, 학원사 (0551)46-4510, 고려서적 (0591)42-4601, 진주문고 (0591)43-8321, 대일서점 (0591)759-9595, 상록서점 (0591)53-5954, 보승기술서적 (0591)745-9837, 서점글밭 (0558)656-3212, 큰바위서점 (0597)62-3594 / **제주**(064) 학생서림 57-0727, 중앙서적 62-8770

※ 일부 비매품 정부간행물은 위 판매센터에서 유가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